

### 동서남북

## 건강한 가정 형성, 국가적 지원 필요할 때



김동길  
전북도의원

항상 5월이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며 이 시기 동안 우리는 가족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가족 구성원들만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족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러나 최근 가족 형태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가족 내의 문제 또한 매우 다양화 되고 있다. 과거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에 대

한 시각은 가족 구성원들만의 문제로서 그 구성원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그 책임 또한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다.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적 부양, 심리·정서적 의존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 생활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가족 구성원 중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로 연결 되어 고통 받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은 결국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비정상적 가정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인 가족들과는 다르게 구조적 특성과 가족 구성원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 역기능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가족 구성원 스스로 해결

하지만 가족을 더 이상 사적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 해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이제는 공적인 부분과 공존하는 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가족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결국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보다 거시적인 방법에

의해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헌신만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다.

가족문제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문제해결의 근본이 될 수 없으며 가족 해체와 어려움을 가중 시켜 결국 사회문제의 커다란 축이 될 것이다. 가족 스스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욕구 해결에 대한 복지의 기능은 사회가 분화되고 변화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족문제의 개입에 있어서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 핵심은 가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가족에 대한 인식도 사적 단위로서의 구조가 아닌 이 사회의 공적 단위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소중함 가정을 지키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함께 국가 제도가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때 인 것이다.

요보호 대상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가족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국가가 인지해야 하며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가족의 복지수준 향상시켜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치료는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후적 대책에 대한 개입과 균형을 맞추어 예방적 대책마련도 강화되어야 하며 소극적 국가개입보다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한 각종 가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편적인 가족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족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社 說

### 출산인구 증대방안 내놓아야 한다

도내 초등학교 10년사이 무려 1만3천명이나 감소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5년에는 현 학령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5만7천726명까지 줄어들 것이라 분석이 나와 충격을 주고있다. 통계청 전북통계사무소와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도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14만9천712명으로 2003년 16만2천998명보다 1만3천286명(8.2%)이 감소했으며, 전년보다 4천387명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학령아동이 급감한 이유는 짧은 출생이 육아나 교육문제에 엄청난 비용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1가정 1자녀 낳기를 절제한 저출산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생이 육아나 교육문제에 엄청난 비용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1가정 1자녀 낳기를 절제한 저출산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출생이 육아나 교육문제에 엄청난 비용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1가정 1자녀 낳기를 절제한 저출산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먼저 노동력의 감소로 생산이 위축되고 소비마저 줄어들어 경제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로 2020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따라 짧은출생의 감소는 바로 짧은출생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아주 취약한 경제구조를 낳게 됨으로써 앞으로 국가경제에도 적지않은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외에도 당장 일부 지역에서는 신입생과 졸업생이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학교의 해체위기와 함께 농어촌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반영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령인구 감소는 고대정원 재조정 및 교사임용 경쟁률 치열, 교원수급 감소 등 교육계 전반에 걸친 큰 파장을 예상하게 된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도 세자녀 이상 낳는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보육금 지급과 더불어 보육원 보육비 감면이나 아파트분양권 우선지급 등 각종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방법으로 출산을 장려하기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는 더 많은 파격적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복지하면 소외계층이나 노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야 한다.

### 비료값 인상 위한 공급중단 안된다

시장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는 5개 비료제조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위한 비료 공급 중단으로 농민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초부터 심상치 않던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각종 영농 자재가격도 엄청나게 뛰어올랐다. 특히 영농에 빠질 수 없는 비료 가격의 경우 지난해 말 평균 24%나 기습 인상하고도 6개월도 채 지나지않아 비료 공급업체들이 현행 가격에서 최대 50% 이상 인상을 요구하고 농협 납품을 하지않고 있다는 보도다. 때문에 비료 사용량의 70%가 쓰이는 5월~6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만 애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번엔 또 인상하게 되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단체들 주장이고 보면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러잖아도 갈수록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경고하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비료공급을 중단한 게 사실이라면 치사스런 행위 일 수밖에 없다. 농업은 단순한 기업차원이 아니다.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농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농업기반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격이나 수입 개방,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위축돼 있는 우리 농촌 실정이다. 그런데 유류와 농자재 값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 의무의 상실되지 않는다면 기적이다. 단지 영농의 의무 상실이 농촌의 문제라면 끝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자칫 농촌에 비료 대란으로 이어져 가족이나 어려움에 놓여 있는 농촌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게 될까 걱정이다.

그러잖아도 갈수록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경고하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농민단체의 주장처럼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비료공급을 중단한 게 사실이라면 치사스런 행위 일 수밖에 없다. 농업은 단순한 기업차원이 아니다.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농민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농업기반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모 악 산

### 조용필 노래 40년

'노래 있는 곳에 사랑도 있고 인생도 있다'는 신라의 한대목 민이 아니다. 노래는 정년 그것을 듣고 즐기는 바탕 위에서만 숭실 수 있는 속내를 지녔다. 듣고 즐기는 바탕은 그것이 곧 예술로 승화되어 국민의 무한 정서를 낳는다. 오늘날의 대중가요가 민족적 감정의 신연속에 꺼지지 않는 빛으로 연변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누가 대중가요를 3분짜리 할값의 유행가라고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언제부턴가 이런 민족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가요를 '국민가요'라 부르고 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국민가수'라 부른다. 국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런 노래와 가수들이다. 일본 가요의 원조, '엔가(演歌)'작곡으로 유명한 '고가 마사오(古賀政明)'는 엔가가 없었다면 일본 사회는 더욱 삭막하고 황량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주변에 꽃과 나비가 없는 것 처럼 말이다.

▼가수 조용필! 그는 국민가수다. 수많은 좋은 노래를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노래말도 만들고 곡도 만들고 노래도 하는 3박자를 모두 갖춘 대가수다. 우리 대중문화의 히로인이자 영웅으로도 불릴만 하다. 그 조용필이 올해

로 노래 40년을 맞았더니 울고 웃던 그의 노래 40년이 결코 조용필만의 애환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우리들도 40년 전, 그 어두웠던 시절을 지나오면서 같이 울고 웃었을지 모른다.

▼1970년대 중반, 일본을 여행했을 때 도쿄의 변화가 신주구(新宿)거리엔 조용필의 캐리커처가 그의 첫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함께 나부끼고 있었다. 1980년엔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였고 그 해 '장밋빛 여자' '단발머리'가 발표됐다. 1981년 '고추잠자리' 1982년 '못찾겠다 꾀꼬리'에 이어 국내가수 최초로 일본 골드디스크 상에 NHK 홀에서 특별 공연을 갖기도 했다.

▼조용필 노래 베스트 10가운데는 '허공'과 '친구여', '그 겨울의 찻집', '킬리만자로의 표범', '꿈' 등의 가라성을 거느리고 있다. 1993년 해운대 비치 콘서트에서는 단독 공연 관중 10만명을 기록했다. 국내 가수 최초로 총 음반판매량 1000만장을 돌파하는 기록도 세웠다. 장부에 여자의 '차라리/차라리/그대의 흰 손으로/나를 잡들게 하라'는 노랫말은 아직도 많은 선남, 선녀들에 회자되고 있다.

### 그래픽 뉴스

### 4월 취업자 19만1천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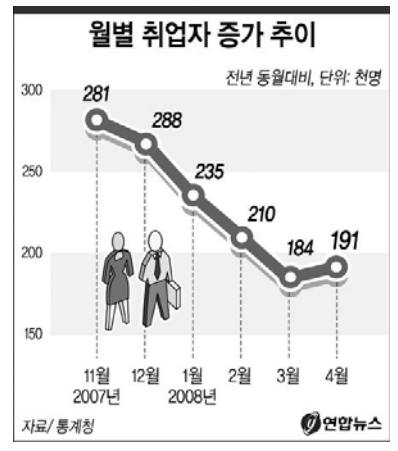
4월 취업자수 증가 폭이 19만1천명에 그쳐 2개월째 20만명을 밑도는 고용부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수는 2천271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만1천명(0.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8월 29만3천명을 기록하면서 30만 명선 아래로 내려선 이후 올해 2월까지 7개월째 20만명대에 머물렀고 3월에는 18만4천명으로 10만명대로 추락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4만8천명), 농업어업(-4만4천명), 제조업(-2만4천명), 건설업(-2만2천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만3천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천명)은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8만5천명)와 60세 이상(-1만4천명)에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감소했고 나머지 연령



대는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1천625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4천명(1.8%)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745만3천명으로 10만3천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3천명 증가에 그쳤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0만9천명, 4만명 줄었다. [연합뉴스]

본란의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누구나 의견을 나눌수 있는 열린마당입니다. 홈페이지(www.domin.co.kr)에 접속 후 '독자투고' 코너에 글을 남기시거나 또는 Fax: (063) 251-7217~8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 · 신 · 이 · 먹 · 는 · 음 · 식 · 이 · 당 · 신 · 의 · 품 · 격 · 을 · 좌 · 우 · 합 · 니 · 다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동사무소 앞 ☎252-0888

